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第28卷 第2號
2013년 12월 30일 발행, pp. 223~258

논문접수일 2013. 12. 10
논문심사일 2013. 12. 13
게재확정일 2013. 12. 23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목 차

- I. 서 론
- II.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
- III. 결 론

* 이 연구는 2013년도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기초연구활동비 수혜를 받아 연구하였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957년 ‘Sputnik 1호’가 발사된 지 반세기가 넘는 현시점에서 각국의 우주에 대한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위성발사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다. 여기에 2012년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로켓발사와 2013년 1월 한국의 나로호(KSLV-1) 발사로 인해 한반도가 새로운 우주경쟁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는 그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¹⁾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주도해왔던 우주개발에 최근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여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우주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우주경쟁의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우주법선언)²⁾을 하면서 1959년

- 1) 2013년 1월 30일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한국의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과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로켓 발사가 금지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책임감 있게(responsibly)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연합뉴스 2013년 1월 31일자). 한편 2012년 1월 23일 UN안보리는 결의 2087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동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도 포함되었다.
- 2) UNGA Resolution 1962(XVIII), 13 December 1963; 동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원칙으로 선언하였다.
 1. 활동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여져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평등을 기초로 국제법에 따라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3. 우주공간과 천체는 주권의 주장, 점유 또는 기타의 수단에 의한 국가에 의해서 취득되지 않는다.
 4. 활동은 UN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5. 국가는 정부기관에 의해서든 비정부단체에 의해서든 불문하고 우주공간에 있어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 비정부단체에 의한 경우 책임당사국은 허가를 발급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기구에 의해서 활동을 할 경우 그 책임은 당해기관 및 기관의 참가국에 의해 부담 지우는 것으로 한다.
 6. 국가는 협력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른다. 국가는 타국의 상응할 이익에 타당한 고려를 배려하고 국가가 타국의 활동에 유해한 간섭으로 하는 활동 또는 실험의 하나가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 계획을 개시하기 전에 적당한 협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설립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정식법규로 만드는 조약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총회의 요구에 따라 COPUOS는 우주활동에 관한 성문법 제정작업에 착수하고, 몇 년간의 준비작업과 교섭을 추진하여 마침내 COPUOS는 1966년 12월 우주활동의 원칙조약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인데, 일명 ‘우주조약’으로 불리며, 우주법의 일반원칙들을 담고 있다.

캐나다 맥길(McGill)대학교의 Ram Jakhu교수는 이 조약이 이미 100개국 이상이 비준한 조약이라는 면에서 ‘우주의 헌법’이며 우주활동의 법적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원칙조약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주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우주의 무기화(weaponis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로 인해 우주조약에 대한 해석과 그 이행방법 및 추후 법 발전에 관한 논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중 적어도 3/4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들³⁾임을 고려해 볼 때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이 우주조약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이 조약이 가진 국제법상 의미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COPUOS를 통하여 UN총회에서 채택된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자조약들의 당사국과 서명국은 2013년 5월 현재 아래와 같다. 현재 한국은 달조약을 제외하고 4개의 조약의 당사국이고 북한은 우주조약과 등록협약의 당사국이다.⁴⁾

7. 국가는 우주물체와 그 승무원에 대해서 관할권과 관리의 권한을 가진다. 등록국의 영역 외에서 발견될 이러한 물체들 또는 그 구성부분은 반환되는 것으로 한다.
8. 발사국 또는 발사시설을 조달하는 국가는 외국 혹은 그 국민 또는 법인의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가진다.
9. 우주비행사는 우주공간에 있어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국가는 외국영역 또는 공해에서 사고, 조난 또는 긴급한 착륙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주는 것으로 한다. 우주비행사는 등록국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되는 것으로 한다.

3) Ram Jakhu,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 2006, pp. 31, 33, 35.

4)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은 1967년 1월 27일에 채택되고, 1967년

〈표 1〉 우주관련조약의 당사국과 서명국 수

협정명	당사국	서명국
우주조약	102	27
구조협정	92	24
책임협약	89	22
등록협약	60	4
달조약	13	4

또한 우주법분야에서 COPUOS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UN결의를 통하여 법원칙으로 발전한 분야로 DBS 원칙, RS원칙, NPS원칙, 개도국협력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⁵⁾ 이러한 UN결의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법적

10월 10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222(XXI), 19 December 1966; 1967년 10월 13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외기권 우주조약 또는 우주조약).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67년 12월 19일 채택되고, 1968년 12월 3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345(XXI), 19 December 1967; 1969년 4월 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구조협정).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은 1972년 3월 29일 체결되었고, 1972년 9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2777(XXVI), 29 November 1971; 1980년 1월 1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책임협약).

-외기권 우주에 발사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75년 1월 14일 체결되었으며, 1976년 9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3235(XXIX), 12 November 1974; 1981년 10월 15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일명 등록협약).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약(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은 1979년 12월 18일 체결되었으며 1984년 7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UNGA Resolution 34/68, 5 December 1979. 일명 달조약).

5) -국제 직접 TV방영을 위한 국가들의 인공위성 이용을 규율하는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DBS 원칙') 으로 이 결의는 1983년 2월 4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RS원칙)으로 이 결의는 1986년 4월 1일 작업그룹에서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하여 결의로 채택되었다.

-우주에서의 핵원료 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NPS원칙)으로 이 결의는 1992년 12월 14일 총회결의 47/68를 통하여 표결 없이(without vote) 채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면서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를 위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협력원칙)으로 이 선언은 1996년 6월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전혀 법적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그러나 때가 되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질 ‘연성국제법’(soft international law)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성국제법(hard international law)보다는 법적 효력 면에서 부족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법임에는 틀림이 없다.⁶⁾ 1974년 11월 12일 UN총회도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⁷⁾ 이렇게 1979년 달조약 이후 COPUOS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비구속적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기에는 우주개발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여 이 두 나라의 견해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유럽우주기구(ESA)의 등장,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우주개발참여로 합의도출이 쉽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1958년 18개국으로 시작된 COPUOS의 구성국이 점차 늘어 2013년 12월 현재 74개국이나 되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곳이 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 논문에서는 우주헌법이라고 불리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서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을 하고 있는 조항들,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COPUOS의 제39차 회기에서 채택되고 제51차 UN 총회 결의의 부속서 형태로 되어 있다.

6) Seidl-Hohenveldern, *International Economic “Soft Law”*, 163 *Hague Recueil* (1979), pp. 165, 194-213;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p. 220.

7) Preamble, UNGA Res. 3232(XXIX), November 12, 1974.

8) Jakhu, *op. cit.*, pp. 89-90.

Ⅲ. 결 론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캐나다 맥길(McGill)대학교 Jakhu교수는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global public interest)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80) Heidi Keefe, *op. cit.*, p. 358.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 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체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의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Space Assets)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제2판, 와이북스, 2012.
- 김한택,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제41호, 안암법학회, 2013.
- 김한택,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우주법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1호, 2010.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9.
- 이재곤,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 조홍제, “우주법상 분쟁해결 방안”, 『원광법학』제24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van Bogaert E. R. C., Aspects of Space Law,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6.
- Cheng, Bin, The 1967 Space Treaty, 9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968,
- Cheng Bi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pace: The Need for New Treaties, 19 JSL, 1991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 Christol Carl Q.,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Pergamon Press, 1982,
- Christol Carl Q., The 1979 Moon Agreement: Where Is It Today?, 27 JSL 1999.
- Diederiks-Verschoor I. H. Ph & 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3rd revise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 Goh Gera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A Multi-Door Courthouse for Outer Spac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 Haanappel P. P. 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khu Ram,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32 JSL, 2006.
- Jasentuliyana N, Article I of the Outer Space Treaty Revisited, 17 JSL 1989,

- Jasentuliyana 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 Keefe Heidi, Making the Final Frontier Feasible: A Critical Look at the Current Body of Outer Space Law, 7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1995.
-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 Matte Nicolas M, *Limited Aerospace Natural Resources and Their Regulation*, 7 AASL, 1982,
- Matte Nicolas M, *Environmental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Use of Outer Space*, 14 AASL(1989).
- Trimble James J. *The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and its Effect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11 *Pepperdine Law Review*. 1984,
- Vereshchetin V S & Danilenko G M, *Custom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of Outer Space*, JSL, 1985
-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Assessing the Present and Charting the Futu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 Williams Maureen, *Space Debris: the academic world and the world of practical affairs*, Proceedings of the 44th Colloquium on the Law of Outer Space, 2001,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 Qizhi He, *The Outer Space Treaty in Perspective*, 25 JSL, 1997.

초 록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우주법선언, 우주조약, 달조약, 국제관습법, 강행규범(*jus cogens*),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Kim, Han-Taek*

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

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 Professor, School of Law, Kangwon National University.